

“교사 1명이 5과목 수업… 고교학점제 개선을”

전교조, 고교학점제 의견조사
교사 10명 중 9명 “제도 문제”
전공과 관련없는 과목에 투입

41명 이상 ‘콩나물 교실’ 심화
교사 60% “생활지도 어려워”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8학년도부터 우선 시행 중인 고교의 교사들이 이 제도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와 괴리로 인해 학교와 학생의 혼란과 입시 준비 과중, 교원 수급과 교실 확보 등의 여건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국 일 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 교사 92.7% “제도 문제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39개 교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548개교 담당자 가운데 92.7%가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65.8%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고교학점제 ‘반대’를 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국 연구·선도학교 분회장 의견조사 결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비율도 26.9%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한 교사가 별다른 지원 없이 여러 교과를 담당하거나 교사 희망에 반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몇 과목을 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1.3%에 달했다. 4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도 27.7%였다. 심지어 5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3.8% 존재했다(3과목 이상 담당에 4, 5과목 담당도 포함).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에도 투입됐다. ‘교사 희망에 반해 전

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가 본인이 희망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교조 측 설명이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심화했다고 교사들은 답했다.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들쭉날쭉해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수업이 존재하는 학교가 59.2%에 달했고, 심지어는 41명 이상인 경우도 6.2%였다. 서울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4.2명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

가 20명을 넘을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모둠활동이나 협력수업 등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학생 주도적인 수업은 어렵고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재검토 위해 교원단체와 상설 협의체 운영해야”**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거나 학급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라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8%는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가 기존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의 괴리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교사 71.3%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삼성바이오에피스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맞손

연세대학교는 (주)삼성바이오에피스와 21일 오전 11시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해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세대 생명시스템 대학에 ‘바이오의약 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오의약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오는 8월에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학부생 10명이(주)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왕동환 중앙대 교수 연구팀 ‘차세대 유기광전자소자’ 구현

중앙대학교는 왕동환 융합공학부 교수(사진)와 대학원 융합공학과 김민수 학생, 장우식 학생이 고성능 차세대 태양전지와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용 유기광전자소자를 구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열 감지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 센서 등 차세대 적외선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동환 교수 연구팀이 제 1저자와 공동 1저자, 교신 저자를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데칼코망 공정 기반 비폴러렌계 박막의 모폴로지 형상제어를 통한 효율적인 광전변환 및 광 검출 소자 제작’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기준 인용지수 18,808을 기록한 재료 분야 권위 학술지인 ‘고급 기능성 재료’에 6월 18일자로 온라인 게재됐으며, 최신호인 9월호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대학혁신 우수사례 톱3’ 선정

호서대학교가 교육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 코로나블루 예방과 극복을 위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혁신 우수사례 톱3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호서대는 포럼 폐막식에서 ‘임-파워(Em-power) 자기성장을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이라는 주제 발표를 포럼 참여자들의 최다 투표를 받은 대학혁신 우수사례 최종 톱3에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유기흥, 위기대학 재정지원 4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위기”
지방세 면제 일몰 삭제 등 담야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유기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사진)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학위기지원 4



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돼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흥 의원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거나 일몰되도록 돼 있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정부, 배달대행업체 갑질 계약서 적발

서울·경기 배달대행 실태 점검
배달료 미기재 등 갑질 조항 다수

서울과 경기도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배달기사의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 점검 결과,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써놓지 않아 배달기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사고발생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도 다수 발견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택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무이자 용자

서울시, 보일러 등 교체 공사비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의 시공비를 무이자로 용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주택 부문 접수를 7월 23일~12월 17일까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용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창호, 보일러, 조명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 주택의 에너

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해준다. 건물 부문은 지난 3월 공고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나, 주택 부문은 무이자 용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협력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SGI 서울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공사비의 80%~100%까지 용자 지원하며, 용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최솟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 부문 모두 포함해 60억원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대현 호서대 총장 집필 도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김대현 호서대학교 총장이 집필한 ‘장면연출과 행동’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다.

22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장면연출과 행동’은 저자가 학교 수업과 연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의 연구와 저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